

#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 전북도, 사업대상자 내달 20일까지 공개모집 선정 시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등 최대 3억원

전북도는 중소 농식품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2018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한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서 3년 이상의 운영실적,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 주원료로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업체이다.

지원 내용은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신제품 연구개발, 상표등록, 품질인증 및 경영·기술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 사업이나 건물의 신·증축, 차량(탑차 등), 지게차의 구입비, 토지, 건물 매입 및 임차료, 허가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비 지원은 자부담 30% 포함, 최고 3억원 이내이다.

/김진성 기자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식품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 사업신청을 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 280-3674)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식품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 농식품 기업의 제조·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식품기업의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성료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참석한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양성평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中 산둥 성 엔타이시 '어깨동무'

### 한중산업협력단지 실무협 개최 교류 강화 세부방안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6일 중국 산둥 성 엔타이시에서 '한중산업협력단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교류협력력을 강화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그간의 교류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무역·투자 등의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양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을, 중국에서는 산둥 성 엔타이시, 장쑤 성 옌청시, 광둥 성 후이저우시 등 3곳을 지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중국 측 3개 지정 도시와 상호 교류협력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한중 간 기업 수출입 편리화 등 양측이 구상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하반기부터 양측 공무원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연구 조사, 합동 포럼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엔타이시를 시작으로 옌청시와 후이저우시와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도시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은 "양국 간 산업 연계, 투자 증진, 사업 협력모델 창출 등을 통해 새만금이 '한중 교역 및 투자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 권고

### 실제 비용과 다른 정액출장비, 사후 정산 의무화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근무지의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법인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사후에 매출전표 등 증거자료를 제출, 정

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의 출장 여비(운임 및 숙박비) 지급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액 지급은 여비의 허위, 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의 전원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 창업아이템 사업화 2차 설명회

### 예비 창업자 6명에 총 2억2000만원 지원

창업선도대학인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2017년 '창업아이템 사업화'에 대한 2차 사업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2차에 정부지원금 총 2억2천만원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창업아이템 사업화'는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기술, 경영멘토, 창업

공간, 기자재 등 인프라 및 자율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모집 분야는 기술 분야와 BM 분야로서 기술 분야는 전문 기술인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

BM 분야는 학생 및 일반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며, 총 모집 규모는 6명이다.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2014년 7월 3일 이후 창업) 기업 대표자가 해당되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일반산단, 기업 러브콜 쇄도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다.

시는 정현율 시장 취임이후 '산업활력 경제도시'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 21개사 31만7,000㎡, 1,554억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고, 16개사 16만6,000㎡를 분양 및 입주 계약하여 1,858억원의 투자와 941명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주)두영기전, (주)케이원의 분양계약에 이어 지난 3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고구마, 사과 등 '건조식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주)디앤오가 지난 6일 제4일반산업단지 4,914㎡ 부지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익산시 공무원들의 발로 뛰는 기업유치와 시민참여를 통

한 기업유치를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다. 익산시는 지난해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 투자금액 제한없이 분양금액의 0.3% 최대 5천만(국내기준)의 포상금을 분양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 유공자인 일반시민, 기업인 및 공무원 등에게 총 13백만원의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익산3,4일반산단 전체 분양률은 51%정도로서 익산시는 앞으로도 공무원, 기업인 및 시민 등 기업유치 참여를 독려하고 수도권 익산 연구 기업인 및 서울투자유치 사무소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이 꾸준히 체결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분양에 매진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세월호 사고 순직인용 결과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 씨가 정부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가족의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따라 지난 5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순직인용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같은 순직 결정 결과를 유가족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이달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달 중순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